

1996년 경제 정책의 운용 방향

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經博)

1996년 경제 운용의 방향은 연착륙 유도과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 목표의 수단간 상충이 예상되는데, 우선 순위를 수출과 투자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두어야 한다. 구조 조정에서 정부의 제한된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 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소기업의 지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며, 물가 불안의 해소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제 정책의 세 가지 초점

1996년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경기 연착륙(soft landing)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1993년 초부터 비롯된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1995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하강세를 나타내리라는 것이 통설로 굳어지고 있다. 성기가 하강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없게 된다.

다음으로는 OECD 가입으로 상징되는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르는 산업 부문의 적응 여

부에 관한 것이다. 1990년 초부터 顯在化되기 시작한 개방의 효과는 점차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기업의 도태를 가중시키고 있다. 성장 산업과 遲進 산업간에 성장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은 제조업에서 점차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높은 노동 비용 때문에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시켜주고 또 퇴출 산업 확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극소화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것이냐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정치 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투자에 적잖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외 경제는 ‘표류시대’라 명명될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다. 예를 들면, 잦은 국지전, 선진국 내 경제 활력의 둔화, 국제통화제도 개편의 필요성 대두,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양상을 띠는 무역 마찰, WTO 시대가 진전됨에 따르는 정부의 국내 경제 보호력 감퇴 등이다.

불투명한 경제 현황

이같은 세 가지 정책 과제에 답하기 전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점검해보자. 국내 경제는 1995년 3/4분기에 9.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성장 활력이 점차 떨어져 4/4분기부터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소비와 수출, 그리고 설비 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면서 이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장률 달성 후 목격되는 지표상 성장률의 둔화라고 하기에는 경기 후퇴가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수출의 경우, 1995년 11월에는 3개월 선행 지표인 수출 신용장 내도액이 1995년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했다. 주력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주력 수출 품목의 대다수가 성숙화되었으며, 개도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등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투자의 경우, 재경원이 실시한 8대 그룹 투자 계획 조사에서 1996년도 투자 규모가 전년의 20~30% 증가에서 10%대 증가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몇 급성장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자금 파문과 향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둔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수출 신장에 크게 기여한 엔고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 경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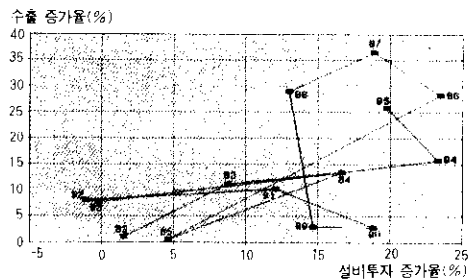
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되고 있다. 미·일간 무역 수지도 축소되고 있으며 미·일간 금리 격차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경착륙 가능성

1996년에 있어서 경기를 하강시킬 주력 요인은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 증가율의 둔화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엔고 현상의 퇴조와 원高 현상의 재현이라는 환율 조건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 활력 감퇴라는 시장 조건이 교차하면서 '수출 둔화 - 투자 필요성 감소'를 빚어내고 있다. 수출과 설비 투자율 추이를 나타낸 <그림 1>을 보면 경기 하강시에 이유는 달랐지만 수출의 둔화가 설비 투자보다 더 크게 기여했음을 나타낸다. 즉, 경기가 정점을 기록했던 해는 1984년, 1988년 그리고 1991년이었는데 각 정점 전후 1~2년간 추이를 보면 이같은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 활력은 수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

<그림 1> 수출 증가율과 설비 투자 증가율 추이



주: 1995년은 전망치.

경영연구원(IMD)의 경쟁력 보고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근 몇년간 닦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낙후, 수출 산업의 중간재와 자본재의 해외 의존,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 환율과 같은 가격 지수 의존적인 수출 경쟁력 등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출이 위축되면 수출과 연동되어 있는 투자도 함께 줄어들어 전체 경기에 도미노 현상을 야기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정착국을 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미자금 파문으로 비롯된 정치적 불안이 1996년 4월 총선과 노사 협상기까지 지속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심리적 위축이 가져온 투자와 소비의 격감이다. 경기 후퇴기에는 늘 호황기 소득 증대의 효과가 나타나 경기를 지탱해주었는데, 이같은 후행성 소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정책의 시의적절한 처방과 효율적인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 경제 성장률이 낙관적인 입장에서 7%대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머물더라도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표 1>은 1996년 경제를 수출 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성장률을 상정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대비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낙관론이 비관론

보다 7 : 3 정도로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정책 운영의 제약 요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도 제약 요인이 없을 수 없다. 첫째, 1996년에는 경기 하강 속에서 불가 불안이 예상되어 정부가 경기 확대 정책을 펴기 어렵다. 그래서 불가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 불가불 불안케하는 요인은 많다. 1996년 총선, 1997년 대선이라는 연이은 선거, 지자체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의 불가 통제력 약화로 인한 공공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불투 비용의 급증 등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극화가 지속되고 정치 불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원인 사재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경우,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난까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도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부도의 증가는 금융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 완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럴 경우 불가 불안에 대처할 어려움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자본 시장 개방 확대로 해외 자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통화 관리가 어렵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로 인해 단기적인 핫

<표 1> 1996년 경제 전망

| 시나리오 | 민간 소비 | 설비 투자 | 재화와 용역의 수출 | 성장률 (%) |
|------|-------|-------|------------|---------|
| 낙관 | 7.3 | 7.5 | 13.2 | 7.2 |
| 비관 | 7.2 | 5.1 | 11.8 | 6.8 |

버니의 유출입이 증대될 것이고, 국내 통화 증가율 목표가 경직적일 경우 국내 신용 공급이 급하게 등락할 수밖에 없어 금융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환율 변동도 심화되어 원화가 고평가될 수 있고 환율 예측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수출 부진과 수출 기업의 환차손이 증가되는 결과를 남기게 된다.

중점 정책 분야

1996년도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은 경기 연착륙을 지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시장 교란 요인을 염두에 두고 통화 공급 목표도 신중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6년 정부 예산에서도 드러났지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정책력이 모아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경제 정책 운용상 중점적으로 고려해주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앞서 제약 요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각종 정책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기 활력 유지와 불가 불안 해소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정책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던 연초에 설정한 정책 목표는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여느 경기 후퇴기처럼 내수 활황에 의해 전체 경기의 활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 신장세가 가능한 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화가 지나치게 절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국내 저축률

제고나 해외로의 자본 유출 증대와 같은 우회적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이다. 즉,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WTO 체제 하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이 줄어들다보면 어차피 개별 경제 주체의 적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자율 경쟁 속에서 대응 능력을 갖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각종 행정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넷째,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한계화되어 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퇴출 기업의 업종 전환 지원이나 인력 재교육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며, 국책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수요 유발을 억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개발 계획을 남발함으로써 부동산 값을 들먹이고 불가를 부추기는 일을 회피해야 한다. 불가 안정책의 수행과 집행은 지방과 중앙정부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재원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있다. 정부가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해주어야 하며 장기 채산성에 대한 우려를 떨기 위해 제3섹터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자동차 업계, 교통 이용자 등을 포함하는 이해 당사자로 구성되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체계있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